



美 환경예산, 사상최대 73억\$ 배정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10일 2001 회계연도 환경예산으로 사상 최대액수인 73억 달러를 배정했다.

환경보호국(EPA)의 캐롤 브라우너 국장은 "행정부가 공공보건과 환경보호를 위해 전대미문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밝히고 미국민들에게 보다 깨끗한 공기와 물, 땅을 공급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클린턴 대통령이 요청한 환경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5대호를 비롯한 호수와 강, 수로, 만 등의 수질개선비 7억 8천400만달러, 대기오염 개선 및 청정기술개발비 4억4천 200만 달러, 환경오염으로 인한 천식등을 앓는 어린이의 치료비용 6천800만달러, 식품안전법 이행비용 7천500만 달러, 인터넷 환경정보망 구축비용 3천만달러 등이다.

또 지방 주정부들이 교통체증과 같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현재 의회에서 논의중인 것과 관련해 22억 달러를 배정했고 유독성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14억 5천만 달러 등이 배정됐다.

환경단체들은 사상최대의 환경예산이 배정된데 대해 만족감을 표시하면서도 의회가 심의과정에서 대폭적인 삭감을 시도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월드워치, '경악스러운 환경문제 발생' 경고

인터넷의 발전과 주식시장의 호황이 '참다운 세계'의 장래를 어둡게 만들어 수자원을 비롯한 다른 자원들의 공급에 위기를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국제 환경보호 단체인 월드워치가 경고했다.

월드워치는 '2000년 - 세계 보고서'에서 세계경제 동향이 1990년대에 비약적인 발전을 보였지만 지구환경은 재난적인 추세를 보였다고 전제하고 20세기는 놀랄만한 기

술발전을 이룩하여 고용이 확대되고 미국경제가 최장기간의 호황을 누릴 수 있게 해주었으나 지구경제의 확장은 지구의 환경체제를 압도해버릴 만큼 웃자라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레스터 브라운 월드워치 회장은 "다우 존스 시세가 오를 때 지구의 건강은 악화됐다"고 말하고 인터넷의 발전도 사람들의 의식을 '가상의 세계'에 집착시켜 지구환경이 처한 진면목을 못보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월드워치는 1984년부터 산림지역의 감소와 지하수량의 감소, 동식물 종의 멸종 등의 항목과 지구온난화 현상과 빙산의 해빙, 파괴적인 폭풍 증가 및 죽어가는 산호초 등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발표해왔다.

월드워치의 이번 보고서는 또한 세계는 21세기 초에 예상밖의 환경문제로 인해 경악스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환경의 쇠퇴는 점진적이며 예측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역사의 몽유병자가 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환경의 폐허화를 바로잡는데 실패할 경우 우리는 지구의 건강을 볼 수 없게 될 것이며 이것이 그 동안의 경제 발전을 역전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日, 쓰레기침출수 누출 방지기술 개발

일본의 17개 회사 그룹이 쓰레기 침출수가 토양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게 방지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니혼 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지난 2월 1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회사그룹은 올 가을께 기술개발이 완료되면 이 기술을 각 지방정부에 이전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문에 따르면 이 개발 그룹에는 요코가와(横河)브리치, 니폰 철강(日鐵)사, 구보타 사, 마에다(前田)사, 간사이(關西)페인트 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침출수 누출방지를 위해서는 쓰레기 구덩이의 측면과 바닥에 깔 9~12mm 두께의 철판이 필요한데 철판의 제

작. 공급은 그룹내 제철회사들이 맡고, 쓰레기장 구덩이는 그룹과 계약한 하청업체가 파며, 여기에서 철판을 시공하는 일은 요코가와 브리지가 맡는다.

빗물이 쓰레기장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역시 철판으로 된 지붕이 쓰레기장 위에 설치된다. 쓰레기 자체에서 생긴 침출수는 도관을 통해 빼낸 뒤 쓰레기장 밖에서 정화 처리된다.

침출수가 토양으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흔히 사용되어온 플라스틱판은 부식등으로 쉽게 부서지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에 비해 철판은 30년 이상 부식에 견딜 수 있다고 한다.

일본에는 현재 전국적으로 약 2천개소의 쓰레기장이 있는데 각 지방정부는 침출수 문제로 자기 지자체 지역내 쓰레기장 건립에 반대하고 있다.

새로운 쓰레기장 건립 비용은 공사건 당 30억엔~10억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지구수면 1천~2천년간 7-8m 상승

세계 대양(大洋)들의 수면이 앞으로 1천 - 2천년 동안 7-8m 가량 상승할 것이나 향후 수백년간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호주의 남극협력연구센터(ACRC)가 10일 전망했다.

ACRC의 빌 버드 교수는 현재 진행중인 지구온난화 현상을 기초로 지구 수면 상승 전망을 제시했는데 ACRC의 이러한 전망은 다음 세기동안 수면이 대폭 상승할 수 있다는 이론과 상충되는 것이다.

ACRC의 전망은 지구온난화의 주요인인 온실가스 배출이 100년후 산업화 이전 시기의 3배 수준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중도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인데 현재 가스배출량은 산업화 이전 시기의 1.5배에 달하고 있다.

장기적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검토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의 위촉으로 마련된 ACRC 전망은 앞으로 지구 수면 상승의 관건은 아직 남아있는 남극과 그린란드의 얼음판이라면서 남극보다는 작은 그린란드 얼음판이 완전히 녹을 경우 대양 수면들이 6m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구 기온이 몇도만 상승하더라도 그린란드 얼음판 대부분이 녹아내릴 수 있을 것이나 1천 - 2천년의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ACRC는 덧붙였다.

보다 큰 남극 얼음판이 완전 녹을 경우 대양 수면들을 55m 정도까지 상승시킬 것이나 2-3도 정도의 기온상승은, 남극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온이 빙점보다 훨씬 아래에 있기 때문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연구소측은 지적했다.

그러나 남극 주위를 떠돌고 있는 빙산들이 보다 많이 대양으로 이동할 경우 향후 2천년간 1-2m 정도 상승할 수 있다고 연구소는 덧붙였다.

연구소는 향후 100-200년동안은 이들 얼음판이 녹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하면서 수온 상승에 따른 수량 확대나 비(非) 극지대 빙산들의 용해에 의해 대양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U 공해기업 책임규정 법안 의회 상정

유럽에서 공해를 유발한 기업은 환경피해 보상이나 복구를 위한 비용을 책임지고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한 법안이 유럽의회에 상정된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9일 발표한 환경 책임에 관한 백서에서 이른바 '환경책임' 규제법안을 도입하면 공해를 유발하거나 환경을 파괴한 기업들이 환경 피해에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U의 마고트 윌스트롬 환경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EU의 15개 회원국들이 환경파괴 기업들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는 법을 각각 운용하고 있지만 "이같은 국내

법들은 환경 파괴의 책임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백서는 환경파괴의 책임과 피해보상 및 복구를 명확히 규정한 범유럽 차원의 법이 만들어지면 “기업들의 태도 변화를 유발해 전체적으로 환경파괴의 예방과 주의 수준이 한층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윌스트롬 집행위원은 많은 동식물 서식지와 수로(水路)가 여러국가의 국경을 걸쳐고 있기 때문에 유럽 차원의 법안이 만들어지면 여러 국가에 동시에 가해진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백서는 유럽의회가 이 법안을 채택하고 각 회원국이 이를 국내법으로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위험한 가스 방출, 위험한 물질의 수송, 폐기물 부식 관리, 유전자변형물질(GMO)로 발생하는 유해한 효소 등에 궁극적 책임이 있는 기업이나 단체들은 피해복구나 보상을 위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 백서는 이 법안의 기본취지에 대해 “환경 피해를 복구하고 예방하는 비용은 납세자들이 지불하는 것 보다 그 피해를 유발한 당사자들이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은행,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 1억5천만\$ 지원**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1억5천달러의 기금 지원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로버트 와트슨 세계은행 환경국장은 이 기금이 풍력, 수력발전, 바이오매스(생물 폐기물) 등 환경친화적이지만 경제성이 없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촉진하는데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금조성을 위해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이 각각 1천만달러의 기부를 약속했으며 이밖에 9개국이 각각 500만달러를 지원키로 했다. 기금 관계자들은 오

는 4월부터는 기금지원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와트슨 국장은 이 기금조성에 참여한 국가들은 지난 97년 12월 채택된 교토의정서에 따라 지원대상 개도국이 감축한 온실가스의 양만큼 배출권을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008-2012년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감축목표를 정한 교토의정서는 오염물질 배출 감축목표를 이미 달성한 국가로부터 다른 국가가 배출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배출권 거래제를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온실가스 감축 10개년 계획 발표

리오넬 조스팽 프랑스 총리는 지난 1월 19일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에너지 소비 산업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등 대기오염 예방을 위한 10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약 100개의 공해 방지조치들을 담고 있는 이 장기계획은 지난 97년 일본 교토에서 합의된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국제의정서(교토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교토의정서는 공업국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오는 2008-2012년중 지난 90년 수준에서 5% 감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핵심적인 조치들 중 하나는 내년부터 실시되는 ‘환경세’ 신설로 에너지 소비 회사들에 탄소 1t 배출당 150-200프랑(23-31달러)의 세금이 부과되게 된다.

오는 2010년 500프랑(77달러)으로 인상되는 환경세는 기존의 일반공해세를 강화한 것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대상 산업을 확대해 나가게 된다.

시멘트나 유리 제조와 같은 에너지 소비가 많은 산업은 이러한 조치들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유럽에서의 경쟁력이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스팽 총리는 그러나 기업들의 사회보장제도 부담분이 경감될 것이기 때문에 환경세 부과로 기업들이 전체적인

부담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경쟁력은 보호되어야 한다"면서 탄소 배출량의 대폭적인 감축 조치가 경제성장 추구를 완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10개년 계획의 목표는 주요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과 화석연료 수요를 감축하려는 것으로 풍력전기 생산증대, 대중교통수단 이용 확대, 식목, 디젤과 휘발유세 소폭 인상 등의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몬트리올 생물안전의정서 채택 - 유전자 조작물질 교역, 환경보호지원 규제

유전자 변형물질(GMOs)의 교역규정에 관한 '생물안전 의정서'가 5년 간의 협상 끝에 지난 1월 29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채택됐다.

생물안전 의정서가 50개국의 기준을 거쳐 발효되면 유전자 조작을 거친 동식물 및 미생물, 동물사료 등의 교역을 환경보호 차원에서 규제하게 된다.

의정서는 이를 위해 씨앗, 동물,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유전자 조작을 거친 광범위한 물질을 다루는 수출입업자들 간에 명확한 사전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의정서는 각국에 대해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유전자 변형물질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수출입 업체들에 대해서는 선적되는 화물에 유전자 변형물질 포함 가능성을 표시하도록 했다.

또 종자, 동물, 미생물 등 뿐 아니라 식품, 동물사료 등 유전자 조작과정을 거친 모든 제품의 교역에 대한 규정도 담고 있다.

의정서는 이와 함께 의정서 발효 2년 안에 보다 구체적인 제품 표시 방법을 마련, 시행하기 위해 각국이 협상에 나서도록 했다.

협상 대표들은 또 의정서에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동등한 위상을 부여하기로 했다. 의정서는 50개국으로부터

비준을 받은 뒤 발효된다.

생물안전의정서는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176개국이 가입한 '생물 다양성 협약'의 정신에 따라 채택된 최초의 협정으로, 환경과 교역상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한 다른 국제협정들과는 달리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관심사를 다룬 최초의 협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과거의 협정들은 위험이 노출된 뒤에야 위기에 처한 동식물과 지구 온난화, 독성 화학물질, 유해 폐기물 문제들을 논의했으며 그나마 농업이나 생물공학 등 거대산업문제들은 다루지 않았다.

마이르 콜롬비아 환경장관은 "의정서 채택은 환경보호를 위한 승리"라면서 "그러나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앤더슨 캐나다 환경 장관도 "매우 성공적이며 실행할 수 있는 의정서를 마련했다"면서 "의정서는 환경과 교역을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고 있다"고 평가했다.

관계자들은 이날 타결된 생물안전의정서가 개별 국가에 자체 안전기준을 마련할 여유를 주면서 환경파괴를 막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